

「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추진단」  
제5차 회의

---

# 2026 복합지원 힘이 되는, 희망을 잇는 연계

---

2025. 12. 16.

관 계 기 관 합 동

## 순서

---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복합지원 성과('25년) .....	2
III. '26년 복합지원 업무계획 .....	6
IV. 추진 일정 .....	13

# I. 검토 배경

- 금융·고용·복지지원이 부처별로 운영되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민·취약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
  - 대내외 경제·사회변화로 취약계층 문제는 단일의 지원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채무·실업·생활고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상황을 악화

## ※ 현장의 목소리

- **서민금융센터 이용자(50대 남):** “다중채무 연체로 채무조정을 받았음에도, 실직 및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게 됨”

-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·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·고용·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(24.1월)
  - 반복·누적되는 문제의 악순환을 끊고 수요자 관점에서 한 번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 서비스를 개시

## < 복합지원 주요 추진 경과 (요약) >

- (24.1월) 금융위·노동부 MOU 체결, 「금융·고용 복합지원 방안」 발표
- (24.4월) 범부처 협업조직 **복합지원팀 출범**
- (24.6월) 금융·고용에 복지까지 연계하는 「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 방안」 발표
- (24.12월)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「복합지원 고도화 방안(복합지원2.0)」 발표
- (25.3월) 「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」 발표 및 현장 간담회 개최
- (25.4월) 금융위·부산·광주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'찾아가는 복합지원' 개시
- (25.8월) 복합지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
- (25.9월) 금융위-전북도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

- 복합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 및 협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'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'을 마련

## II. 복합지원 성과('25년)

◇ 고용·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합지원이 집중 제공됐고, 금융여건(고금리 대부잔액, 연체기록 등) 개선 및 신속·정확한 상담에도 기여

① 연계자 수: '24년 대비 76%(+59,237명, '25.3Q 기준) 증가

○ '24.3월 서민금융센터(금융위)-고용복지+센터(노동부) 간 전산 연계가 개시되면서 특히, 금융-고용 연계가 크게 증가하고 전체 연계자 또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

\* [금융-고용] '23.6월 연계 개시, '24.3월 전산연계 신규 도입  
[금융-복지] '18.7월 (전산)연계 개시

【표1】 금융-고용-복지 연계자 수(명)

구분	'23년 계	'24년 계	'25년(~3Q) 계
고용	3,218	19,877 (+16,659, +518%)	57,555 (+37,678, +190%)
복지	43,100	58,502 (+15,402, +36%)	80,061 (+21,559, +37%)
합계	46,318	78,379 (+32,061, +69%)	137,616 (+59,237, +76%)

② 연계 대상자: 고용·소득 취약계층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

○ 복합지원은 당초 도입 취지에 따라 무직·비정규직, 연소득 2,500만원 이하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

【표2】 금융-고용-복지 연계자 중 취약계층 비중

구분	무직·비정규직 비율		소득 취약계층 비율	
	복합지원 前*	복합지원 後*	복합지원 前*	복합지원 後*
금융-고용	56% (1,298명)	79% (59,033명)	75% (1,734명)	80% (59,718명)
금융-복지	62% (15,258명)	68% (77,249명)	78% (18,955명)	76% (86,942명)

\* [금융-고용] '24.3월말 본격 개시 ☞ '24.1~3월을 복합지원 前, '24.4~'25.3Q를 복합지원 後로 분류  
[금융-복지] '24.6월말 본격 개시 ☞ '24.1~6월을 복합지원 前, '24.7~'25.3Q를 복합지원 後로 분류

③ 정책 실효성: 이용자의 금융여건 개선 및 연계 정확성 제고에 가시적인 기여

○ 복합지원 **非**이용자에 비해 **고금리 대부금액 감소폭이 크고** **연체·채무조정 실효 비중이 낮아 이용자의 금융여건 개선**

- 특히, **금융-고용-복지가 함께 연계되는 복합지원을 받을 경우 개선효과가 뚜렷\***하며, **고위험 취약계층의 실질적 회복**에 기여

\* 대조군(非복합지원 등) 대비 고금리 대부잔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고, 연체자 비중 및 채무조정 실효자 비중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

【표3】 복합지원 이용자 금융여건 변화(25.상반기 기준)

구분	非복합지원	복합지원		
	금융 단독	금융-고용	금융-복지	금융-고용-복지
고금리 대부잔액*	△33.9%	△37.5%	△30.0%	△44.4%
3회 이상 연체자 비중	10.3%	5.5%	8.8%	5.2%
채무조정 실효자** 비중	4.9%	2.0%	4.2%	1.8%

\* 대부업권 대출액, 저축은행 신용대출액, 장기카드대출액 등(평균금리 약 18%/年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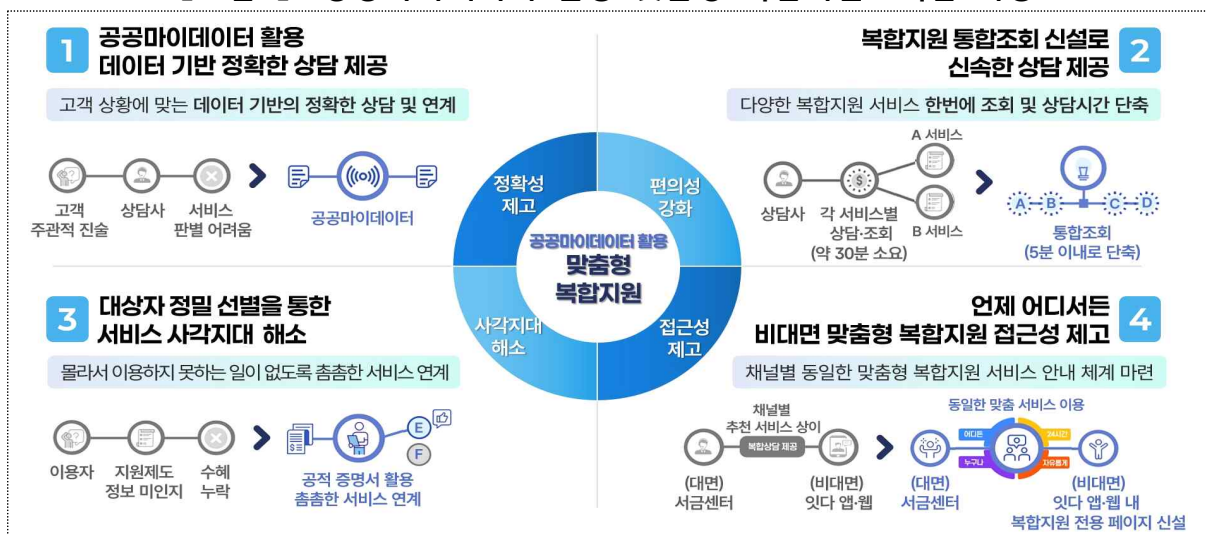
\*\*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

○ **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으로 대상자 선별 강화 및 신속·정확한 복합지원 상담 제공**(25.8월)

- 공마데 도입은 복합지원의 ①연계 정확성 제고, ②편의성 강화, ③사각지대 해소, ④접근성 제고 등 서비스 고도화 체계 마련

※ 기존 고객 진술에 의존한 주관적 상담은 연계 부정확성, 서비스 판별 불가 등 고객 불편 야기

【그림1】 “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” 핵심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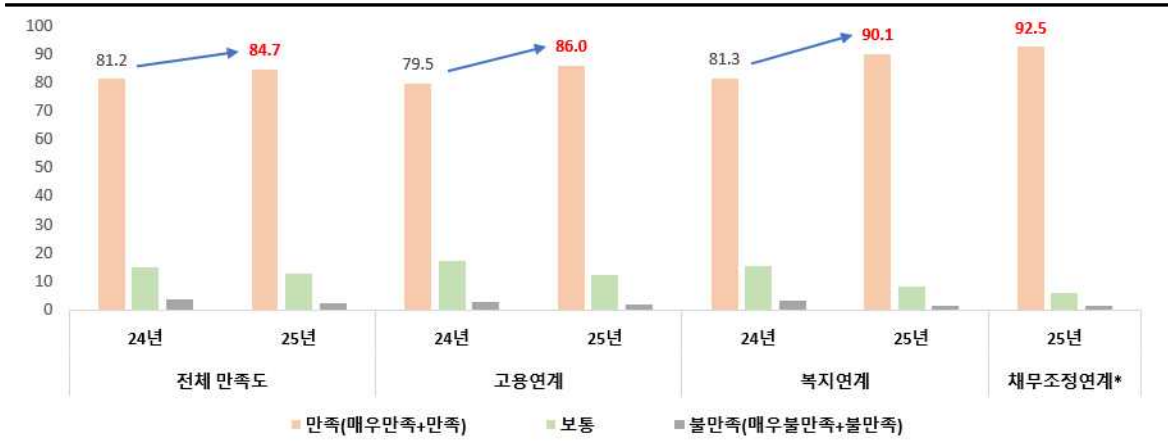


④ 정책 만족도: 만족도가 높지만, 연계분야 확대·인센티브 강화 등 개선요소 상존

○ 이용자의 84.7%가 복합지원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, 고용, 복지 연계도 86.0%, 90.1% 만족한다고 답변(1,216명 대상 설문조사)

※ 복합지원 이용자의 90.1%가 재이용 의사 표시

【그림2】 복합지원 이용자 전체 및 분야별 만족도(%)



\* 채무조정 연계는 '24년 미조사

【표4】 복합지원 이용자 전체 및 분야별 세부 만족도(%)

구분	매우 만족	만족	보통	불만족	매우 불만족
전체 만족도	56.7 (5.2)*	28.0 (△1.7)	12.9 (△2.2)	1.6 (△0.8)	0.8 (△0.5)
고용연계	55.9 (6.6)	30.1 (△0.1)	12.4 (△5.0)	1.7 (△0.3)	0.0 (△1.0)
복지연계	61.8 (10.7)	28.3 (△1.9)	8.4 (△7.2)	1.0 (△1.2)	0.6 (△0.4)
채무조정연계**	67.1 ( - )	25.4 ( - )	5.9 ( - )	1.3 ( - )	0.2 ( - )

\* ( )는 '24년 대비 증감률 %p

\*\* '24년 미조사

○ 다만, 공공의료,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연계 및 이용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, 복합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더 폭넓고 촘촘한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 제시

➔ 이용자 건의사항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, 「2026 복합지원 업무계획」을 마련

## 참고1

## 복합지원 주요 통계 (단위: 명)

### □ 전체 실적

구분	'24년	'25.1Q	2Q	3Q	소계
복합지원 인원*	78,379	36,487	55,315	45,814	215,995
고용 연계 인원 <sup>1)</sup>	19,877	14,420	26,127	17,008	77,432
복지 연계 인원 <sup>2)</sup>	58,502	22,067	29,188	28,806	138,563
동시 <sup>고용+복지</sup> 연계 인원	6,292	6,229	10,371	8,307	31,199

\* 복합지원 인원: 1) + 2)

### □ 고용 연계 인원 주요 특징

구분	'24년	'25년(~3Q)	소계
고용 연계 인원	19,877 (100.0%)	57,555 (100.0%)	77,432 (100.0%)
직업별			
무직·비정규직	15,828 (79.6%)	44,503 (77.3%)	60,331 (77.9%)
정규직 등	4,049 (20.4%)	13,052 (22.7%)	17,101 (22.1%)
소득별			
2.5천만원 이하	16,336 (82.2%)	45,116 (78.4%)	61,452 (79.4%)
2.5천만원 초과	2,038 (10.3%)	8,908 (15.5%)	10,946 (14.1%)
기타(무응답 등)	1,503 (7.6%)	3,531 (6.1%)	5,034 (6.5%)
연령별			
청년층(34세 이하)	7,628 (38.4%)	21,165 (36.8%)	28,793 (37.2%)
비청년층(35세 이상)	12,249 (61.6%)	36,390 (63.2%)	48,639 (62.8%)

### □ 복지 연계 인원 주요 특징

구분	'24년	'25년(~3Q)	소계
복지 연계 인원	58,502 (100.0%)	80,061 (100.0%)	138,563 (100.0%)
직업별			
무직·비정규직	38,530 (65.9%)	53,977 (67.4%)	92,507 (66.8%)
정규직 등	19,972 (34.1%)	26,084 (32.6%)	46,056 (33.2%)
소득별			
2.5천만원 이하	45,146 (77.2%)	60,751 (75.9%)	105,897 (76.4%)
2.5천만원 초과	7,502 (12.8%)	12,740 (15.9%)	20,242 (14.6%)
기타(무응답 등)	5,854 (10.0%)	6,570 (8.2%)	12,424 (9.0%)
연령별			
청년층(34세 이하)	12,379 (21.2%)	20,052 (25.0%)	32,431 (23.4%)
비청년층(35세 이상)	46,123 (78.8%)	60,009 (75.0%)	106,132 (76.6%)

### □ 동시<sup>고용+복지</sup> 연계 인원 주요 특징

구분	'24년	'25년(~3Q)	소계
동시 연계 인원	6,292 (100.0%)	24,907 (100.0%)	31,199 (100.0%)
직업별			
무직·비정규직	5,076 (80.7%)	18,913 (75.9%)	23,989 (76.9%)
정규직 등	1,216 (19.3%)	5,994 (24.1%)	7,210 (23.1%)
소득별			
2.5천만원 이하	5,214 (82.9%)	19,830 (79.6%)	25,044 (80.3%)
2.5천만원 초과	616 (9.8%)	3,656 (14.7%)	4,272 (13.7%)
기타(무응답 등)	462 (7.3%)	1,421 (5.7%)	1,883 (6.0%)
연령별			
청년층(34세 이하)	1,787 (28.4%)	7,869 (31.6%)	9,656 (30.9%)
비청년층(35세 이상)	4,505 (71.6%)	17,038 (68.4%)	21,543 (69.1%)

### Ⅲ. '26년 복합지원 업무계획

#### < 기본 추진방향 >

- ◇ '24년 개시된 복합지원이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연계범위 확장 및 협업기반 강화
- ① (연계분야 확대)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·노후·소상공인 등 복합지원 연계 확대 및 강화
  - ② (지역 중심) 전담 조직 신설,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추진
  - ③ (민·관 협업) 민간금융사와의 앱(App)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,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마련
  - ④ (복합지원 환류) 고용복지+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합지원 사례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

#### 【복합지원 4대 중점 추진 방안】

추진 방안	<p><b>①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<b>공공의료·노후분야</b> 등 복합지원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립중앙의료원, 국립암센터, 국민연금공단과 신규 연계</li> <li>-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(체납 건강보험료 지원) 추진</li> <li>-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</li> </ul> </li> <li>◆ <b>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</b> 체계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규 연계</li> </ul> </li> </ul>
추진 방안	<p><b>② 지역 중심 복합지원 내실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<b>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찾아가는 복합지원' 전담 조직(서금원) 구축</li> <li>- 지역 금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
추진 방안	<p><b>③ 민·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<b>민간금융사 앱 연동</b>을 통한 원스톱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토스 협업</li> </ul> </li> <li>◆ <b>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</b>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BNK부산은행과 협업하여 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시범 출시</li> </ul> </li> </ul>
추진 방안	<p><b>④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<b>복합지원 연계 심화</b>를 위한 <b>네트워크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복지+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지역별 간담회 개최</li> </ul> </li> </ul>

## 가.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분야 확대

###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 추진

#### 1]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·노후분야 복합지원 확대('26.3Q) 금융위·복지부

- (현행) 최근 만성질환자 증가\* 및 고령화 추세\*\* 등 공공의료, 노후관리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의료,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성 제기

\* 만성질환 진료인원 비중(%) : ('15년) 34.0 ('20년) 42.5 ('24년) 47.1

\*\* 65세이상 인구비중(%) : ('15년) 12.8 ('20년) 15.7 ('24년) 19.2 ('25년) 20.3

➔ (개선) 복지부 관련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·국립암센터(공공의료), 국민연금공단(노후)이 복합지원 연계 기관으로 신규 참여

- (금융 ↔ 공공의료) 금융(서금융·신복위) 상담자 중 질병 등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
  - 공공의료기관 이용 중인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\* 및 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
- \* 예) 의료 용도(증빙 시)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대 100만원 대출 가능
- (금융 ↔ 노후) 금융 이용자 중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(노후준비지원센터)으로 연계
  -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 중 대출 및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

#### 2] 채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('26.1Q) 금융위·복지부

- (현행) 채무조정이 확정된 39세 이하 청년 중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채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원(50만원 한도)

※ (지원 대상) ①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확정자, ②건강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누적, ③누적 체납금액 200만원 이하, 모두에 해당하는 자

-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어 “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”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조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필요

➔ (개선) 복합지원 이용자의 경우 39세 초과자도 지원대상\*에 포함 (※ 재원 소진시 지원 조기마감 가능)

\* 분기별(또는 월별)로 지원 대상자에게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링크 알림톡을 발송하여 안내

- 체납 건강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(잔여 체납액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지원)

### ③ 취약 채무조정 이용자 등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(‘26.4Q) 금융위·복지부

- (현행)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상대적 취약차주인 서민 금융 거절내역\* (정책서민금융 신청반려자) 정보 추가\*\* (25.2월)

\* 신용점수 하위 20% 이하, 상환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된 취약차주

\*\*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」 개정

- 다만,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중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우려가 큰 대상이 여전히 존재

➔ (개선)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\* 정보를 추가하고,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\*\*를 신설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

\* 예)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%이면서 연소득 2,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

\*\* 예) 변제 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자

### ④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(‘26.3Q) 금융위·중기부

- (현행) 과중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으나, 재기지원·채무조정 등 회복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적시 지원에 한계

➔ (개선)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·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을 위해 복합지원과 소상공인 시스템<sup>중기부</sup> 연계

○ (금융 → 소상공인) 금융(서금원·신복위) 상담자 중 소상공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기관\*으로 안내·연계

\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자산관리공사(새출발기금, 새도약기금)

○ (소상공인 → 금융) 소상공인 지원기관 상담자 중 금융(채무조정) 등 복합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서금원 또는 신복위로 안내·연계

## 나.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내실화

### '찾아가는 복합지원' 확대 및 지역 기반 복합지원 네트워크 강화

⑤ 지역과 함께하는 '지역 밀착형 복합지원' 확대(<sup>26.지속</sup>금융위·행안부·지자체·민간금융사)

○ (현행) 지자체(읍·면·동 중심) 대상 '찾아가는 복합지원'을 시범 시행\*하여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 체계 마련

\* 금융위-지자체 간 업무협약 체결(25.4월: 부산·광주, 9월: 전북)

- 전국 50개의 서민금융센터와 102개의 고용복지\*센터 및 지자체 등 정부 주도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

-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및 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복합지원 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

\* '찾아가는 복합지원' 13회(상담서비스 84건) 및 현장교육 총 22회(598명) 등 수행

➔ (개선)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지역금융 x 서민금융 협업모델 시범 추진 및 '찾아가는 복합지원' 他 지자체 확산 등을 통해, 지역 맞춤형 복합지원\* 서비스 제공

\* 예) 지자체와 지역 금융소비자 보호기관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복합지원 이동 상담 진행 및 상담직원이 정기적인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는 출장소 구축 추진 등

① (전담조직) '찾아가는 복합지원' 수행 전담조직 신설(서금원) 등을 통해 중앙(본부)-현장(지역) 간 체계적 실행기반 마련

\* 본부 기획업무 수행 전담팀 구성 / 현장 지역본부별 서민금융센터 실무운영

② (지역 금융기관 협업) BNK부산은행과의 긴밀한 물리적 결합·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

- 부산 서민금융센터 내 BNK부산은행 창구를 함께 마련하여 부산 지역주민의 복합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\*

\* 한 곳에서 상담, 대출, 정책서민금융, 채무조정, 고용, 복지(생계포함) 등 하나로 묶은 서비스 가능 → 대기·이동시간 감소로 서비스 체감 만족도 향상 기대

- BNK부산은행의 '이동점포 버스'를 활용, 「찾아가는 복합지원 버스」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으로 현장 상담·홍보 병행

※ 지역금융 × 서민금융 협업모델 구축 기대 효과

◆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지원 정책 확산 및 신뢰 제고

- 단순 협력이 아닌 각 기관 전문가가 근무하여 상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합지원

◆ 정책자금과 지역민간금융의 연계 지원 효과 극대화

- 초기진단(서금원) → 맞춤형 솔루션 설계(다기관 협의) → 실행(은행/유관기관 연계) → 사후관리(정기모니터링)가 한 공간에서 단절 없이 진행

③ (전면 확대) '찾아가는 복합지원'을 광역 지자체<sup>17개</sup>와 MOU 없이 일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<sup>행안부</sup>를 통해 협조 요청

< 지역 중심의 복합지원 확대 >

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

중앙-현장 간 유기적인 추진체계 마련

전담조직 신설

서민금융센터 내 BNK 부산은행 창구 마련

지역 금융기관 협업

'찾아가는 복합지원' 광역 지자체 확대

광역 지자체 협업

## 다. 민·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

### 민·관 협업을 통한 복합지원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

#### 6 민간금융사 앱(App)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(‘26.2Q) 금융위·민간금융사

- (현행) 민간금융사\*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지원 배너 연계, 대출 거절자 알림톡 발송,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월 약 11만건의 복합지원 유입이 있으나 단순 안내에 그쳐 실질적 재기지원에는 한계

\* 시중은행, 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회사, 핀테크사 등 50여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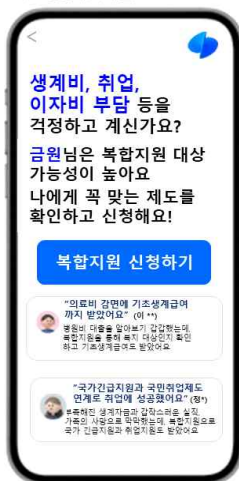
➔ (개선) 고객 접점이 넓은 민간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, 이를 통해 홍보 효과도 제고

- 민간 금융회사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강화 추진
- 시범적으로 토스 앱\* 내에서 서민금융 ‘있다’를 연동하여 복합지원 안내부터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

\* 대표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(누적 가입자 3,000만명)으로 간편송금, 결제 서비스 등 제공, 민간금융사 32곳(저축은행 21곳, 캐피탈 7곳, 은행 3곳, 카드 1곳) 앱 연동

< 예시: 토스 앱 내 복합지원 서비스 연동 화면 >

#### ① 복합지원 소개



#### ② 토스 웹뷰 연계



⇒  
인앱  
방식

#### ③ 서민금융 있다 연동



#### ④ 복합지원 신청



\* 토스 앱은 복합지원 예상 수요자에게 연계제도를 추천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며, 실제 서비스 실행·데이터 처리 및 저장 등은 있다(서금원) 앱과 서버에서 수행

7 **민간금융사 복합지원 전용상품** 시범 출시('26.3Q)<sup>금융위·민간금융사</sup>

- (현행) 국민취업지원제도<sup>노동부</sup>를 통해 취업 시 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(0.1~0.5%p) 등 인센티브 제공('24.3월~)
- 복합지원 이용자의 일시적 위기 해소를 넘어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을 지원할 필요

➔ (개선) 민간금융사(BNK부산은행)와 협업으로 복합지원 이용자에 대해 **소액신용대출 및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상품** 시범 출시\*

\* 시범적으로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 한정 출시

① (소액신용대출) 서민금융(햇살론 등)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**경제층**을 대상으로 성실상환 등의 경우 우대금리\* 제공

\* (안) 대출한도 : 50 ~ 300만원 / 금리 : 최저 연 7.00% ~ 최고 연 9.99%

② (적금) 단순 고금리 적금이 아닌 **성실한 재기 의지를 격려** 하고 **종잣돈 마련**을 위한 **보상형 금융상품\*** 마련

\* (안) 가입금액 : 월 1 ~ 20만원 / 적용금리 : 최대 7% / 가입기간 : 1~3년

## 라.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

### 복합지원 초기상담 효율성·정확성 제고 및 현장 중심 환류 체계 구축

8 복합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**협업 네트워크 확충**('26.1Q)<sup>금융위·노동부</sup>

- (현행) 고용복지+센터-서민금융센터는 상담직원 대상 **현장교육\*** 등을 통해 복합지원 상담역량을 제고, 다만 기관 간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**네트워크, 협업 기반**은 부족한 상황

\* 고용복지+센터→서민금융센터 50회, 서민금융센터→고용복지+센터 102회 교육 시행

➔ (개선) **폭넓은 지역 기반**을 갖춘 고용복지+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센터와 「**지역별 간담회**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운영

- 기관 간 **지역 특성**에 맞는 복합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고 **인적 네트워크**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

## IV. 추진 일정

◇ 기관별로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, '26년 말 관계기관\* 공동으로 복합지원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발표

\* 금융위, 행안부, 복지부, 노동부, 중기부, 서금원, 신복위 등

정책 과제(4대 중점 방안 및 8개 세부 계획)	시행 시기
<b>가.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분야 확대 및 강화</b>	
① (복지부 협업)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·노후분야 복합지원 확대	'26.3Q
② (복지부 협업)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	'26.1Q
③ (복지부 협업) 취약 채무조정 이용자 등 위기가구 발굴 대상 확대	'26.4Q
④ (중기부 협업)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	'26.3Q
<b>나.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내실화</b>	
⑤ (지자체 협업)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 추진	'26.지속
<b>다. 민·관 협업 강화를 통한 복합지원 고도화</b>	
⑥ (민간금융사 협업) 민간금융사 앱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	'26.2Q
⑦ (민간금융사 협업) 민간금융사 복합지원 전용 금융상품 마련	'26.3Q
<b>라. 복합지원 환류 및 상담직원 역량강화</b>	
⑧ (노동부 협업) 복합지원 연계 심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	'26.1Q

## 1. 금융·고용·복지 복합지원 방안 ('24.6.27.)

## ① 금융-고용-복지 복합지원 체계 마련

## ○ (고용) 고용지원제도 연계 강화 및 연계자 혜택 확대

- 온·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<sup>'24.3Q</sup> 및 고용지원제도(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 등) 5종 이상 연계 개시<sup>'24.2Q</sup>
- 정책서민금융 未이용\* 금융-고용 연계자에 대한 신용·부채관리 컨설팅 지원<sup>'24.4Q</sup>

\* (기존)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만 신용·부채관리 컨설팅 제공

## ○ (복지) 복합지원 접근성 제고 및 혜택 확대

- 금융-정신건강 안내 확대<sup>'24.4Q</sup> 및 위기가구 발굴 정보 신규 추가<sup>\*'25.1Q</sup>
- \* 정책서민금융 관련 신청반려자 및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 추가
-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강화 및 가입 인센티브 제공<sup>\*'24.4Q</sup>
- \*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0.5%p 금리 인하

## ② 복합지원 인프라 및 협업 교육 강화

○ 불법사금융 관련 협업 체계 마련(서민금융센터-금감원)<sup>'25.1Q</sup>○ 복합지원 업무시스템 고도화, 금융-고용-복지 간 협업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및 연계 강화<sup>'24.3Q</sup>

## 2. 복합지원 2.0,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('24.12.18.)

## ① 고용·복지 외 유입경로 확대

-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(50여개社) 이용 고객 대상 복합지원 안내 강화<sup>'25.1Q</sup>

## ② 고용·복지 외 연계분야 확대

- 서민금융센터-직종단체(한국예술인복지재단) 간 상호안내 강화<sup>'25.1Q</sup>

○ 서민금융센터-주금공 주거 연계 시스템 마련

- 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시 은행에서 특례 요건 충족(정책서민금융·채무조정 이용 정보) 여부를 전산으로 즉시 확인 가능<sup>'25.2Q</sup>
- \* (기존)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정책서민금융 등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기 증명
- 서민금융센터 및 서민금융 잇다(App)에서 특례전세자금 예상 보증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조회 기능 도입<sup>'25.3Q</sup>

③ 대상자 선별 및 상담현장 역량 강화

- 공공마이데이터(21종)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도입<sup>'25.3Q</sup>
  - 상담의 정밀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고, 상담시간 단축 및 정확성 향상,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
  - 「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」 개최 등 현장 목소리 수렴
- 복합지원 상담인력 확충(서금원·신복위 총 2명)을 통한 현장 인프라 확충<sup>'25.4Q</sup>

3.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 ('25.3.13.)

① 찾아가는 복합지원 시범 시행<sup>'25.4월</sup>

- 금융위-지자체(부산, 광주, 전북)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복합지원 제공
  - 찾아가는 복합지원 이동상담, 구청 공무원 대상 복합지원 현장 교육 실시\*, 찾아가는 금융상담센터(전북신보 협업) 운영 등
  - \*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 총 13회(상담서비스 84건 제공) 및 현장교육 총 22회(598명) 등 수행

② 복합지원 모범사례 전파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유도<sup>'25.4Q</sup>

- 복합지원 우수 상담 사례집을 제작·배포 및 업무 우수자(기관) 표창(금융위, 노동부, 광역자치단체, 서금원·신복위 기관장) 수여

### 참고3

##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개요

#### □ 사업 개요

- 채무조정이 확정된 복합지원 신청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, 최대 50만원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

#### □ 지원 내용 및 조건

구분	지원 방안
관련 기관	국민건강보험공단(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)
주요 내용	<p>(신복위→건강보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지원 대상)</b> ①사전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 확정자(지원 구분 무관), ②건강보험료 체납 기간 3개월 이상, ③누적 체납금액 200만원 이하, ④복합지원 신청자, <b>모두에 해당하는 자</b></li> <li>• <b>(지원 내용)</b> 체납 건강보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(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지원)</li> <li>• <b>(지원 방법)</b> 지원 대상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 신청 안내(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링크 알림톡 발송 등) 단, <b>재원 소진 시 지원 조기마감 가능</b></li> </ul>

#### □ 지원 절차

① 접수	② 명단 송부	③ 대상 확인	④ 통지·입금	⑤ 분납 지원
신청 접수	신청자 내역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	지원 대상 확인 및 계좌 등 회신	신청인 지원결과 통보 및 가상계좌로 대납	잔여 체납 건강보험료 분납 지원
신용회복위원회	신용회복위원회	국민건강보험공단	신용회복위원회	국민건강보험공단